

종합

광주~완도·목포~광양 고속도로 재검토

서남권 SOC 부족 지역민 강력 반발

정부, 교통망 중복 투자·비효율 구간 순위 조정 추진

정부가 서남권 물류체계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광주~완도, 목포~광양 고속도로 구간을 재검토하거나 공사시기를 늦출 것으로 알려져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3개 구간 가운데 7.2km는 수요 재검토와 지역 개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사업시행 여부 및 시기 등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주~광양간 고속도로 69.2km는 광양항 활성화 및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차원에서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광주~완도, 목포~광양고속도로는 뒤떨어진 서남권 사회간접자본 확충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도외시한 처사"라며 "지역활성화를 위해 오히려 공사를 앞당겨야 한다"고 정부의 방침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시설

한미FTA 농산물 피해 확산 현실화되나

정부가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을 공개했다. 협상 타결 50여일 만에 공개된 협정문을 보면 농산물의 피해가 예상보다 훨씬 컸을 것으로 보여 우리 농촌의 미래가 더욱 걱정된다.

협정문에는 30개 민감품목 이외의 농산물은 양자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의 적용을 받아 1년간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도록 규정돼 있다.

미국무역대표부는 한미 FTA 체결로 수출액의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농산물에 대해 즉각적인 비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농산물의 무차별적인 수입 공세는 변한 일이다.

최고기와 돼지고기와 같은 30개 민감품목 역시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이 어려워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드가 발동되는 수입물량이 FTA 발효 첫해 27만에서 시작해 15년차에는 35만4천까지 늘어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물량은 국내 연간 최고기 소비량이 35만을 넘는 실정이어서 세이프가드 발동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돼지고기 역시 세이프가드 대상이 냉장삼겹살 등 일부 품목에 한정된 것으로 드러나고 실효성이 의문이다.

FTA 협정문 공개... 농업분야 주요 내용

쇠고기 15년·냉장삼겹살 10년내 관세철폐 냉동 오렌지 주스·포도주 등은 즉시 없애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문이 일반에 공개되면서 협상 과정 내내 '최선의 방어'에 초점이 맞춰졌던 농업 분야의 주요 합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추(현행 관세율 270%)·마늘(360%)·양파(135%)는 15년, 인삼(223~574%)은 18년, 국내 수요가 많은 동양배(45%)와 후지 사과(45%)는 20년 이후 관세를 폐기하지 않는다.

냉동 오렌지 주스·포도주 등 관세 즉시 철폐 = 한미 FTA 발효와 함께 관세가 즉시 없어지는 농산물 품목은 오렌지 주스(냉동)·포도 주스·화훼류·커피·포도주·밀·사료용 옥수수 등 모두 585개다.

쇠고기 등 세이프가드 효용성 논란 = 또 쇠고기·돼지고기·사과·고추·마늘·양파·인삼·보리 등 30개 농산물 품목의 경우 수입 물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발동된다.

또 5년 안에 오렌지 주스(냉동)·토마토 주스·완두콩·감자(냉동)·위스키·스파게티·국수·당면·냉면·인스턴트 커피·간장·고추장 등의 관세가 철폐된다.

15년에 걸쳐 현행 40%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없어지는 쇠고기의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은 한미 FTA 발효 첫 해 27만에서 시작한 뒤 해마다 6천씩 증가, 15년차에는 35만4천까지 늘어난다.

반면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사과·낙농품 등 주요 민감품목은 15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관세 철폐가 진행된다.

그러나 이같은 세이프가드 기준과 관련, 일각에서는 쇠고기의 경우 연평균 쇠고기 소비량 35만8천t을 웃돌아 발동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돼지고기 세이프가드 대상도 냉장삼겹살 등 일부 품목에 한정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행 40%인 쇠고기 관세는 15년, 돼지고기 가운데 냉장 삼겹살 등은 10년에 걸쳐 관세가 없어진다. 그러나 냉동 돼지고기는 FTA 발효 시점과



25일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우리 측 수석대표가 한·미 FTA 협정문 공개 예정본을 들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례행사 식중독 사고 이젠 근절해야

전국에 식중독 주의보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질병관리본부 등은 25일 '법정부 식중독종합대응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 경계태세에 들어갔다.

보건 당국은 해마다 식중독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지만 사고가 왜 연례행사화 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 매년 수만명이 식중독에 걸려 이에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이 1조원에 달하고 있다.

식중독은 흔히 더운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온난화가 뚜렷해지면서 계절을 가리지 않고 있다. 특히 한여름보다는 위생에 대해 주의가 떨어지는 4~6월에 집중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려면 위생관리에 대한 사회 전반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위생 사각지대는 주변에 널리 있다. 특히 집단급식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의 의식이 변화하지 않으면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도 개인위생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 손을 자주 씻고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기만 해도 식중독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국민들도 개인위생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 손을 자주 씻고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기만 해도 식중독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철저한 위생관리와 청결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화 의혹사건 경찰청 감사관 일문일답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력 사건을 둘러싼 '늑장수사'와 '외압' 의혹에 대한 자체 감찰을 마친 경찰청의 남창수 감사관은 25일 "조직적 은폐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감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남 감사관과의 일문일답. -감대원 납대문서 수사과장이 감찰조사를 받을 때 한화가 평생 먹여살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인가.

▲감 과장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나와서 수사중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추가 조치하겠다.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 그 부분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히) 밝힐 수가 없다.

▲이태순 경찰청장이 사전에 보고 받지 못했다는 데 이번 검찰 조사 대상에 포함됐는지. 통화내역 조사도 이뤄졌는지.

▲최근 고문에 대한 통화내역을 확인해보니 이태순 청장과의 전화통화 내역은 없었다.

"평생 먹여 살려주겠다" 강대원 진술은 사실

-감대원 수사과장이 공역수사대로부터 제대로된 수사 자료를 넘겨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는데.

▲확인한 했는데 양측 주장이 팽팽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감대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 납대문서로 사건을 이첩 지시했다는 데 왜 이첩 지시했다고 하는지. 그 과정에서 흥청장과 교감이 있었나.

▲김 부장은 본인의 판단 실수라고 얘기하고 있고 흥청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외압 부분에 대한 진실 규명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감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4월 18일과 23일 두 차례다. -한화 쪽 다른 사람들과 경찰이 접촉했는지 확인했나. 예

전 발표와 감찰결과 보면 다른 부분 많은데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다고 보나.

▲그런 부분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청 수사부장과 납대문서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서울클럽에서 112 신고가 들어간 다음 태평로 지구대의 근무가 내달렸다고 하는데. 초동 단계부터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닌가.

▲그건 아니다. -최근 문 청장 말고 다른 한화 관계자가 경찰 간부에게 전화를 한 흔적은 없나.

▲폭넓게 얘기하면 특정할 수 없다. 한화증권 Y고문과 이태순 청장은 통상적인 관계로 1년에 3-4차례 통화했다. 본건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전화나 접촉이 없었다.

정치권 무르익는 대선 무드

범여-민주당 소통합 변수로

한나라당이 대선 후보 경선 체제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대선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범여권에서도 경선 후보간 물밑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당 간 통합적 결과도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 본격 레이스=내달 초부터 공식 대선 후보 등록을 받고 본격적인 경선에 돌입한다. 경선 공고와 관련서류 제출 기간 등을 감안하면 후보등록 마감시한은 늦어도 내달 10일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선거법은 당 경선후보로 등록하면 경선결과에 불복해 독자출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은 국민 검증위원회 회의 첫날부터 장외 검증문을 놓고 날 선 신경전을 벌여 향후 검증국면이 간단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정동영-김근태 회동=열린우리당 양대 주주격인 정동영 김근태 전 의장이 지난 24일 비공개 회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 내달 초 대선 경선후보 등록

우리당, 김근태-정동영 24일 회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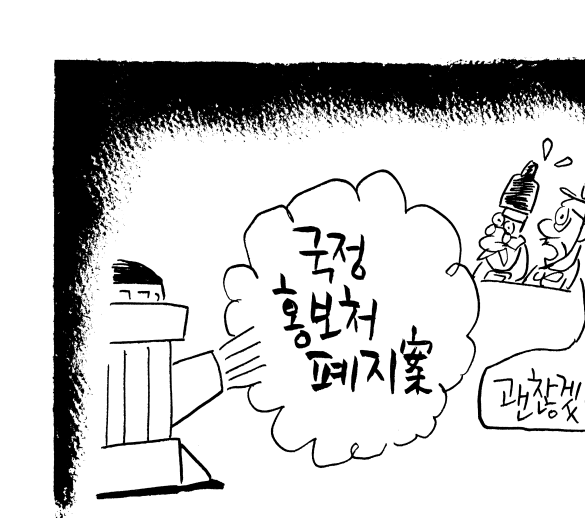
두 사람은 이날 오전 조계사에서 열린 법요식에 나란히 참석한 뒤 오후 여의도 한 호텔에서 단둘이 만나 1시간 가까이 범여권 통합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선 일정과 관련한 정 전 의장이 "선관위 경선 위탁 시한(8월말)보다 한 달 정도 앞서 시작해 추석 전인 9월 20일까지는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통합대상의 범위 설정과 관련한 '배제론'을 둘러싸고 양당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양측은 가급적 협상을 6월로 남기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의 협상기류로 볼 때 쉽지않은 양아 보인다.

특히 통합대상의 범위 설정과 관련한 '배제론'을 둘러싸고 양당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양측은 가급적 협상을 6월로 남기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의 협상기류로 볼 때 쉽지않은 양아 보인다.

일본만평 - 김중두



기자한테 맞는 것 보단 덜 아프다

"국민은 대선서 여야 대결 원해"

김대중 전 대통령 밝혀

김대중 전 대통령은 25일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은 이번 대선에서 여야 일대일 대결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동교동 자택에서 열린 우리당 김혁규 의원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김 의원이 "민주세력의 분열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고 민주 개혁세력이 어떻게든 대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고 배석한 김중률 의원이 전했다.

그는 다만 "대통합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김 전 대통령이 노력해달라"는 김 의원의 요청에 "물러난 대통령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정치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역량도 없고 분수에 넘치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부영 전 의원 사전영장

주수도회장으로부터 금품수수 혐의

다단계 판매회사 제이유 그룹의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25일 이 회사 주수도 회장으로 부터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이부영 전 의원(사진)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04~2005년 주 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뒤 제이유 측에 자신이 책임자로 있던 장준하 기념사업회로 수여여원을 기부하게 하고 주 회장으로부터 차명계좌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광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祐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業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F A X 2200-521> <F A X 227-0195>
경 치 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F A X 2200-536> 서울지서 02-773-9331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사 업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